

정책토론회 자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양 현 봉
(KIET 연구위원)

2011. 4. 15.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

< 목 차 >

I. 검토 배경 및 목적	1
II. 창업 및 청년창업 동향	3
1.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동향	3
2. 청년창업 동향	5
III. 청년창업 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6
1.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실태	6
2.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점	23
IV.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29
1. 기본방향	29
2. 향후 정책과제	30
(1) 청년창업 분 조성	30
(2)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의 체계적 추진	30
(3)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32
(4)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	33
(5)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및 제도전 제도 개선	35
(6) 청년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37

I. 검토 배경 및 목적

-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신진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생기업들의 창업이 활발해야 하며, 창업한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가정신 발휘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
-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창업정책을 강화함과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옴.
- 최근 경기회복세와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 등이 맞물려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창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여전히 악화되는 추세에 있음.
 - 전체 실업자(실업률)가 2008년 77만명(3.2%)에서 2009년 89만명(3.6%), 2010년에는 92만명(3.7%)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0년말 현재 15~29세의 청년실업자가 34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청년실업률 또한 8.0%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정부가 그동안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 부족,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및 청년창업 붐 조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본 자료는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창업¹⁾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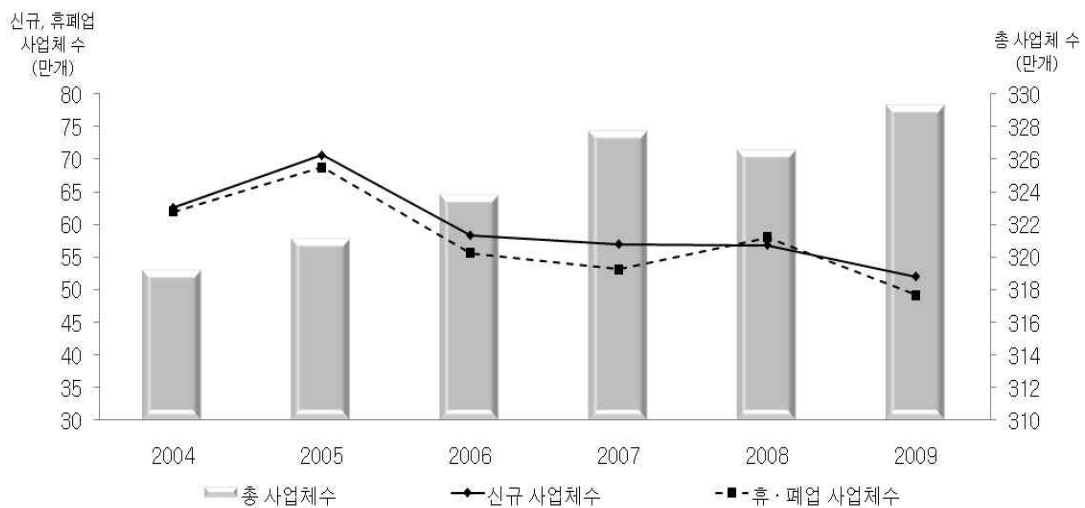
1) 통계청은 15~2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은 40세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청년창업을 정책의 수혜대상인 40세 미만 청년층의 창업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함.

Ⅱ. 창업 및 청년창업 동향

1. 창업 및 일자리창출 동향

- 통계청이 발표한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2009년 기간동안 연평균 59만 5,336개 사업체가 창업하여 연평균 2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2004~2009년 기간동안 휴·폐업한 사업체는 연평균 57만 7,501개로 나타나, 연평균 188만개의 일자리가 소멸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전체 일자리는 같은 기간 연평균 29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 > 2004~2009년 기간 신규 및 휴·폐업 사업체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 현황 분석’, 2011.2.

< 표 1 > 연도별 신규(창업), 휴·폐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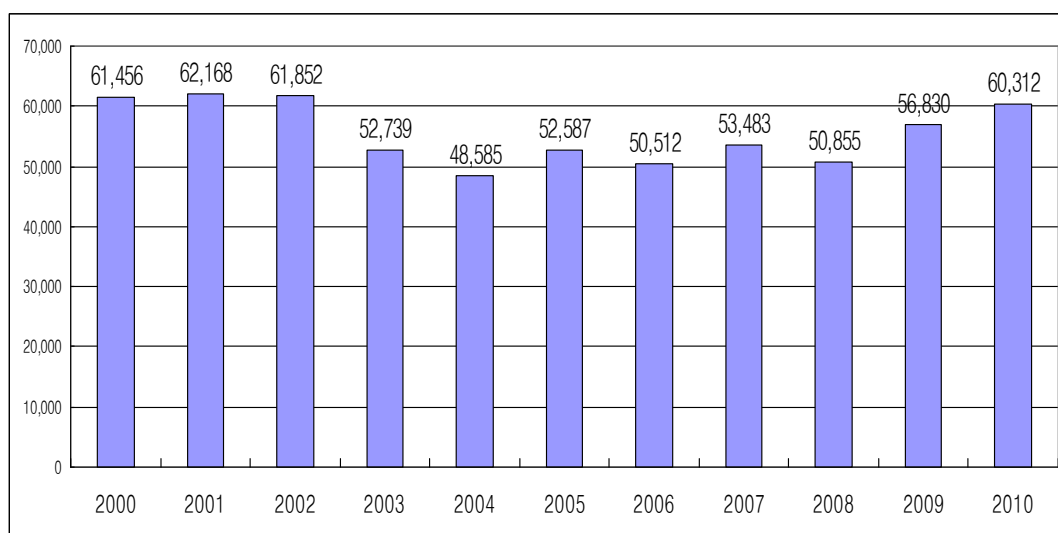
	신규 사업체 (A)		휴·폐업 사업체 (B)		증감 (A-B)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4	625,598	2,387,991	619,548	2,161,697	6,050	226,294
2005	706,389	2,520,431	687,053	2,100,826	19,336	419,605
2006	582,997	2,087,126	556,269	1,726,366	26,728	360,760
2007	569,377	2,193,083	530,714	1,697,066	38,663	496,017
2008	568,125	1,949,877	579,759	1,925,393	-11,634	24,484
2009	519,531	1,876,805	491,665	1,656,035	27,866	220,770
총계	3,572,017	13,015,313	3,465,008	11,267,383	107,009	1,747,930
연평균	595,336	2,169,219	577,501	1,877,897	17,835	291,322

자료 : <그림 1>의 자료 출처와 동일

- 한편,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신설법인 수는 6만 312개사로 2009년(5만 6,830개사) 대비 6.1%(3,482개) 증가하여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그림 2 > 연도별 신설법인 수 추이

단위 : 개



자료 : 중소기업청

2. 청년창업 동향

-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 등이 맞물려 2010년도 신설법인 수, 특히 30세 미만 청년창업이 2009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29.0%)을 기록함.

< 표 2 > 2008~2010년 기간 연령별 신설법인 수 추이

단위 : 개, %

	2008년		2009년		2010년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30세미만	2,027	4.0	2,417	4.3	3,117	5.2
30~39세	13,751	27.0	14,993	26.4	15,401	25.5
40~49세	21,478	42.2	23,252	40.9	24,254	40.2
50~59세	10,446	20.6	12,409	21.8	13,633	22.6
60세 이상	3,115	6.1	3,698	6.5	3,823	6.4
기타	38	0.1	61	0.1	84	0.1
총계	50,855	100.0	56,830	100.0	60,31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 한편, 최근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말 현재 벤처기업 CEO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11.8%로 2001년 (56.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남.

< 표 3 > 벤처기업 CEO 중 20~30대 청년층 비중 추이

단위 : %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대	6.0	3.8	0.3	0.1
30대	50.2	43.8	14.8	11.7
40대 이상	43.8	52.4	84.9	8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Ⅲ. 청년창업 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1.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실태

(1) 2011년도 사업예산 현황

- 2011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전용 지원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파악되며, 전체 사업예산은 1,120억원으로 조사됨.
 -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770억원, 고용노동부가 청년 창직·창업인턴제사업 등 2개 사업에 111억원을 지원함.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200억원, 대전광역시가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에 20억원, 경기도가 G창업프로젝트에 19억원을 책정하여 지원함.
- 청년창업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창업교육에 54억 5,000만원, 창업경진대회에 19억원, 사업화 지원에 639억원, 기타(창업선도대학 및 창직·창업인턴제사업) 407억 5,000만원을 지원함.
 - 창업교육사업으로는 청년층의 창업의욕 고취 등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패키지사업(대학창업강좌, 창업동아리)과 창업대학원, 기술창업아카데미, 하이서울 창업스쿨이 실시되고 있음.
 - 창업경진대회 사업으로는 청년층의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사회적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소셜벤처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표 4 > 2011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 현황

유형	사업명	예산 규모	소관 부처	비고
창업 교육	대학 창업강좌	13.5억원	중기청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으로 통합
	창업동아리 지원		중기청	
	창업대학원 지원	12억원	중기청	5개 대학원
	기술창업 아카데미	20억원	중기청	
	하이서울 창업스쿨	9억원	서울시	
경진 대회	창업경진대회	10억원	중기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통합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소셜벤처 지원사업	9억원	고용부	
사업화 지원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229억원	중기청	
	청년창업 사관학교	180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 추진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191억원	서울시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20억원	대전시	
	G창업 프로젝트	19억원	경기도	
기 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305.5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 추진
	청년 창직· 창업인턴제 사업	102억원	고용부	2010년부터 추진
합계		1,120억원		

주 :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조사자료 (2011년 2월 현재)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임.

- 사업화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창업자의 시제품제작 등을 위해 예비기술창업자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서울시) 및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대전시)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기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과 창업·창직 희망 청년층의 창업기업 인턴 연계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2) 사업별 추진 실태

1) 창업교육사업

가. 대학창업강좌

- 중소기업청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여 창업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학점이 인정되는 대학 창업강좌를 지원하여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있음.
- 창업 관련 과목을 정규강좌로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지원대상 대학을 상·하반기로 구분·선정하여 강좌당 450만~700만원을 차등 지원해옴.
- 그동안 일반강좌 및 전문강좌로 지원되었던 창업강좌는 2006년부터 대학창업강좌로 발전되어 실시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50개 창업강좌를 지원하여 2,000명을 교육하였으며, 2009년에는 94개 강좌에 6,237명을 교육함.

- 2010년도 중소기업청의 창업강좌 지원 규모는 2009년 대비 5,000만원이 줄어든 4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에는 창업동아리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30개 대학에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지원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창업강좌 지원사업은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개설·제공됨에 따라 대학생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표 5 >

연도별 창업강좌 지원실적

단위 : 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강좌	전문강좌	일반강좌	전문강좌	대학강좌	대학강좌	대학강좌	대학강좌
선 정	58	79	11	18	54	26	50	94
교육인원	3,006	3,637	384	754	3,700	1,000	2,000	6,237

자료 : 중소기업청

나. 창업동아리 지원

- 중소기업청은 대학 내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래 예비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리를 발굴하여,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옴.
- 동 사업은 사업화 가능한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대학생 창업 동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하며, 선정된 창업동아리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및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아이템당 300만~800만원을 차등 지원함. 2010년도 예산은 7억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대학창업강좌와 통합·운영됨.

- 특히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연합회와 지원기관 등이 참가하는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기관과의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
- 2008년말 현재 179개 대학에 759개 창업동아리가 결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2009년에 120개 창업동아리를 우수 동아리로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전국의 창업동아리 회원 중 10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등을 지원함.

< 표 6 >

창업동아리 지원현황

단위 : 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 동아리수	131	133	100	50	55	60	120
해외연수	15팀/60	21팀/84	25팀/100	1팀/50	2팀/78	2회/100	3회/100
벤처기업 현장방문	600	675	1,596	2,545	1,852	976	2,033
벤처창업 스쿨교육	402	-	240	350	999	1,200	430

자료 : 중소기업청

다. 창업대학원 지원

-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각적인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기관 역시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2004년부터 서울(호서대)·경기(중앙대)·충청(한밭대)·전라(예원예술대)·경상(진주산업대) 등 5개 권역에 창업대학원을 설치하여 지원해 오고 있음.
- 창업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으로 국내에 최초로 창업전문가를 직접 양성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2007년 2월 처음으로 호서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원에서 10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실습 커리큘럼 보완 등을 통해 창업컨설팅 관련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있음.
-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501명이 창업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하였으며, 이 중에서 199명이 창업(기창업자 포함, 2009년 2월말 기준 순수 창업자는 31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지역전략산업의 신규 창업 지원 및 지역거점 창업후견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대학원과 지역 소재 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5개 대학원간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유 등 협업을 통하여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임.

< 표 7 > 창업대학원 지정·운영 현황

	한밭대	진주산업대	호서대	예원예술대	중앙대
권역	충청	경상	서울	전라	경기
국·사립	국립	국립	사립	사립	사립
개설형태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5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개설시기	2005. 3	2005. 3	2005. 3	2005. 3	2004. 9
정원 ¹⁾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1) 1, 2학년 각각 30명

< 표 8 > 창업대학원 졸업생 배출 및 창업 현황(2010.3월말 기준, 누계)

단위 : 명

	중앙대	호서대	한밭대	진주산업대	예원예술대	총계
졸업생 및 수료	86	101	106	99	109	501
- 창업 ¹⁾	40	51	40	32	36	199
- 진학(박사)	0	11	7	5	9	32
- 취업·기타	46	39	59	62	64	270

자료 : 중소기업청

- 주 : 1) 창업에는 기창업자 포함(2009년 2월말 기준 순수 창업자 수는 31명)
 2) 휴·퇴학생은 제외하였으며, 취업의 경우 주로 경영 및 컨설팅 관련 업체로 조사

라. 기술창업아카데미

-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 후 수료생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후 창업자금 및 컨설팅(멘토링)을 알선·연계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지역별로 기술창업학교를 지정하고 지정교육기관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며, 기관당 최대 8,000만원(창업선도 대학에 포함될 경우 8,000만원, 대학창업패키지에 포함될 경우 3,000만원, 일반 기관일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억원이며, 창업교육역량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연계, 전문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5년 사업 시행 이후 운영기관이 늘어나 2009년 27개 기관이 기술창업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05~2009년 기간동안 총 2,178명이 수료하여 이 중에서 1,017명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 표 9 >

기술창업학교 운영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주말)창업패키지
운영기관	11개	11개	12개	15개	27개
수료현황 (참가/수료)	384명/297명	326명/266명	357명/256명	449명/368명	1,195명/991명
창업현황	156명	100명	169명	174명	418명

자료 : 중소기업청

마. 하이서울창업스쿨

- 서울특별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연계지원, 경영지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창업스쿨은 6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창업과정은 외식/유통/서비스 등 자영업창업, 벤처창업 과정은 정보통신/전기전자/기계 등 벤처창업, 디지털콘텐츠 창업과정은 게임/교육/내비게이션/생활서비스 등 애플리케이션 창업, 인터넷창업과정은 쇼핑몰/마켓플레이스 등 인터넷창업, 패션창업과정은 의류/액세서리/패션잡화 등 패션창업, 경영 컨설팅창업과정은 재무/마케팅/인사조직 등 경영컨설팅 업종의 창업을 교육하고 있음.
 - 교육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예정자로 만 20세 이상(단, 벤처창업과정은 창업예비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기업)이며, 교육기간은 3개월, 수강료는 15만원임.

- 동 창업교육의 특징은 창업단계에 따른 체계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개별 교육생의 창업지도를 위한 담임교수제 운영,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무료 컨설팅 및 자금연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임.
- 2011년도 창업스쿨 운용예산은 9억원이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음.

2) 창업경진대회사업

가. 창업경진대회

- 중소기업청은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창업의욕 고취 및 창업 분위기 확산, 그리고 일반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벤처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1998년부터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음.
- 창업경진대회는 2006년까지 대한민국 창업대전의 부대행사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2007년부터 별도의 행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벤처 창업경진대회를 통합하여 대규모 행사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선발된 수상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특허출원 및 기술평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10년도 창업경진대회 예산은 2009년에 비해 1억원 줄어든 8억원이며, 2011년도 예산은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청장상 표창 및 상금(200만원 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며, 모집부문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학력 제한이 없으며, 교수·연구원 및 예비 기술 창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음.
- 2007~2009년 기간동안 창업경진대회 수상자(팀)는 70명이었으며, 이중에서 28명이 창업하여 매출액 14억원, 고용 76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표 10 > 창업경진대회 운영실태(2009.6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수상팀		11	15	44	43	113
성과	창업(개사)	3	11	14	-	28
	매출액	894	282	238	-	1,414
	고용	21	27	28	-	76

자료 : 중소기업청

나. 소셜벤처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소셜벤처경연대회를 2009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음.

* 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말함.

- 소셜벤처경연대회는 먼저 권역별로 예선대회를 치르고, 권역별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권역별 대회는 청년창업, 일반창업,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입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상금과 전국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짐. 전국대회는 신규 참가팀 및 권역별 경연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입상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상금과 2,000만원 한도의 창업지원금 등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
- 2011년도 소셜벤처경연대회 예산규모는 9억원이며, 특히 청년창업 모집대상은 15~39세 사이의 청년으로서 소셜벤처 창업 초기단계에 있거나 창업 3년 이내의 개인 및 단체임.

3) 사업화 지원

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중소기업청은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자리 창출이 경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높아져 지난 '08.6.11일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기술창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2009~2011년 기간동안 총 1,183억원(2011년 2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 기술창업자가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 및 장비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음.

- 특히 2010년부터는 실험실창업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함과 아울러, 녹색·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2009년도 예비기술창업 선정자 1,399명 중에서 1,341명이 창업 (95.9%)하였으며, 이들 기업에서 1,183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6월 기준으로 이들 예비기술창업기업이 수출 278만 달러를 포함하여 61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전준비, 창업 멘토링, 시제품제작, 실제 창업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소기업청은 고학력 인력의 미취업자 수가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의 CEO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함.
- 동 사업의 2011년도 예산규모는 180억원이며, 지원내용은 실전 창업교육, 1:1코칭(전담교수), 시제품 제작 등 신제품개발, 시장조사 대행 등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1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함.
- 팀 단위로 신청시 선정·지원 등에서 우대하며,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하도록 하고, 졸업심사 우수평가자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게 됨.

-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의 대표이며, 특허보유, 대학·연구기관 기술이전,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창업(예비 창업자만 해당)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음.
 - 다만,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비 창업팀의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동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비·공간·코칭·자금 등이 입체적으로 지원되고,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지원(기술-자금-창업보육시설 등 One-Stop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다.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 서울특별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선정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성공 CEO로 육성하고자 젊고 패기 넘치는 창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20~39세의 청년으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전문지식을 가진 자, SOHO창업 희망자이며, 지원인원은 1,000명 내외임.
- 지원내용은 창업공간(업체당 10~15m², 사무실 집기, 세미나실

등)의 무상 제공, 심사결과에 따른 창업아이템개발 활동비(월 70만~100만원까지 1년간) 지원과 아울러 창업 관련 용자알선 및 대출보증 등의 재정지원,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대상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과 온·오프라인 법무·세무·특허 업무 지원 등임.

- 지원분야는 지식창업(게임개발업, IT기술 융합디자인, 방송 영상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지식콘텐츠, 게임프로그래머, 방송 극작가, 출판기획자, 교육컨설턴트, 번역, 웹디자이너, 1인 지식서비스-프리랜서, 아이디어 상품 기획제작, 패션업 등), 기술창업(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공예디자인 등), 일반창업(무인 복합매장, 퓨전음식개발, 뮤지컬 공연기획, 전통식품제조업, 이벤트플래너, 도·소매유통업, E-biz 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는 2009년에 118억원, 2010년 192억원, 2011년에는 1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고 있음.
 - 2009년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한 948명 중 401명 (기존 창업자 포함)이 2010년 6월까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 일단은 동 프로젝트가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라.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 대전광역시는 창의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대전지역 대학(원)생 창업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심각한 청년실업을 대전시에서 앞장서 해소하기 위해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3년간 총 300개 창업 목표)를 2010년 부터 추진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학생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첫 출발하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구직(求職)에서 창직(創職)”으로 바꾸는 창업 붐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동 프로젝트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식과 기술,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에 중점을 두고, 대전광역시와 대학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한 1회성 창업지원이 아닌 창업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대전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창업하는 지역 대학(원)생이며, 지원방식은 대학에서 대학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대전광역시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선정 후 대학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되, 기업당 2,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됨.
- 대전광역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전지역 소재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100개씩 총 300개 대학(원)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대덕특수 펀드 수익금 26억원과 은행 및 주요 기업의 기부금, 그리고 대전시의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임.

마. G창업 프로젝트

- 경기도는 우수한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고 창업절차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G-창업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의 과정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기업 CEO의 1:1 멘토 지원, 창업 노하우 등 사업에 필요한 경영 전반의 전수뿐만 아니라 6개월간 공동보육 과정 등도 지원하게 됨.

- 2011년도 경기도의 예산지원 규모는 19억원이며, 경기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4) 기 타

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 중소기업청은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부터 창업준비, 창업 후 성장 단계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창업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지역 거점별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 지원내용은 창업교육패키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대학의 자체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예산규모는 305억 5,000만원임.
 - 창업교육패키지사업 : 그동안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창업강좌·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 창업전담인력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되 연계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전창업리그(기존의 중소벤처창업경진대회)와 연결되는 ‘지역창업경진대회’를 창업선도대학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창업 붐 조성과 창업자 발굴에 주력함.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대학 등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최대 5,000만원, 팀 창업은 7,000만원)함.

- 대학 자체 프로그램 : 창업선도대학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자금(현금 50% 이상)으로 투자하여 기업가 정신 확산, 창업특기생 선발 등의 창업분위기 조성, 사업화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창업지원사업을 보완·강화하는 프로그램임.
- 2011년 3월말 현재 6개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4년제 대학 13개, 전문대학 2개가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청년창직·창업인턴제사업

- 고용노동부는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6개월간의 인턴제사업을 통해 현장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직 및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참가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31세 미만)의 창업 및 창직 희망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
 - 창업인턴 :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국가·지자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 창직인턴 : 문화산업 창직 관련분야 전공자, 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등
 - 재학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하나,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함.
- 인턴연수 시행기업은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창직 현장훈련에 적합한 기업임.

- 창업인턴 시행기업 :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직인턴 시행기업 : 지식서비스업 분야 창업·창직 후 7년 이내 기업, 독립직업인 및 도급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가 관련 산업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이며, 인턴사용 인원 수는 기업당 2인 이내로 제한
- 2011년도 예산 규모는 102억원이며, 인턴 참여자에게는 6개월간 매월 80만원 한도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함.
- 임금, 연수·근무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은 연수시행자(기업)와 인턴 참여자간 협의 후 결정하되, 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연계성 미흡

- 2009년 6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연계강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부처간 협력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프로세스간 연계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사업과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사업화 지원, 창업 이후 멘토링 및 정책자금 지원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시·도별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창업교육,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등의 사업이 중앙-지방정부간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창업경진대회 사업의 경우, 중앙-지방정부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가 제고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미흡

- 최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창업교육사업은 다양화되고 지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하지만 창업강좌 등의 창업교육이 획일적이며 특성화되지 못하고, 심도 있는 창업교육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
 - 대부분의 창업교육이 일과 중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수 예비청년창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질 좋은 창업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대학 이전 단계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이 중요하나,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 이전 단계의 창업교육은 주로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쿨(Bizcool)²⁾ 및 YES Leaders 특강 사업만이 실시되고 있음.

2) 중소기업청은 청소년 창업교육 및 창업유망주 발굴·육성을 위해 비즈쿨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규모는 43억 8,700만원임.

(3) 청년창업기업 지원 사업화자금 부족

- 청년창업기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창업 지원 정책자금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2011년도 중진공 정책자금(3조 2,075억원)의 43.6%인 1조 4,000억원이 창업자금으로 편성·지원되고 있으나, 매출실적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는 창업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또한 청년창업자에게는 엔젤자금, VC(벤처캐피털) 투자가 필요하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엔젤자금 및 VC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엔젤자금 투자실적 : ('00) 5,493억원 → ('03) 3,031억원 → ('06) 971억원 → ('09) 346억원

< 표 11 >

엔젤투자 실적(신규)

단위 :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 건수	1,291	1,007	573	453	194	174	238	220	152	87
투자 금액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897	492	346

자료 : 중소기업청

- 정부는 모태펀드 조성(2010년 결성누계액 : 1조 2,691억원)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해오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30% 수준에 불과함.
 - VC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투자금액 : ('07) 3,650억원 → ('08) 2,908억원 → ('09) 2,476억원

< 표 12 >

연도별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1~6월
전체 투자금액(A)	9,917	7,247	8,671	4,148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투자금액(B)	3,650	2,908	2,476	1,207
비 중 (B/A, %)	36.8	40.1	28.6	29.1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투자정보센터

(4) 청년창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미흡

- 청년창업자들은 기술·지식·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기업이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초기부터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
- 정부가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5) 청년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창업 관련 정보의 DB 구축이 필요하나, 아직 창업 관련 DB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창업 단계별 연계지원 및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지원사업 등 관련 사항을 안내받고 싶어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또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6) 창업실패에 따른 재도전 장치 및 재창업 지원 미흡

○ 우리나라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및 제도적 장치로 인해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창업실패로 인한 기업부도 및 파산시 CEO의 압류면제 재산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재도전의 의지를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의 면책재산 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면책재산)에 의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1,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720만원에 불과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②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720만원을 말한다.

- 또한 기존 ‘벤처패자부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년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등으로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재창업자금 지원실적 : 2010년 200억원의 예산 중 27억원만 집행

(7) 청년창업 붐 조성 미흡

- 청년층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시·도 및 전국 차원의 창업경연대회 개최 등 이벤트사업과 함께 언론 홍보를 통해 청년창업의 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대부분 기존 창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실정이어서, 청년창업 붐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제도의 마련과 함께, 창업경연대회, 실전창업리그 등을 언론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청년창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IV.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 2010년말 현재 실업자 수가 92만명(실업률 3.7%)에 이르고, 특히 15~29세의 청년실업자가 35만명 수준(실업률 8.0%)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정부가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청년창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과거 벤처기업정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년창업 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간, 중앙·지방정부 사업간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청년층의 창업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대학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청년창업자들이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친화적인 정책자금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창업 이후 사후관리,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등 건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향후 정책과제

(1) 청년창업 붐 조성

-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청년창업 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10월 중 1주간을 ‘청년기업주간’(YES Week = Young Entrepreneurship & Start-up Week)으로 설정하여 언론과 공동으로 ‘청년창업 붐’ 조성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연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년의 경우, 5월부터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경연대회, 청년창업활성화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 10월에 대한민국실전창업리그 및 엔젤마트 개최, 우수청년기업가 포상 등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해서는 과거 벤처 붐 조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의 체계적 추진

가. 청년창업 교육사업의 실효성 제고

- 우선 대학에서 교양과목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창업강좌의 수업 내용을 질적으로 심화하고, 창업강좌의 특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창업강좌 지원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1학기 지원사업 위주에서 1년 또는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창업강좌·기술창업아카데미 등의 창업교육을 일과 중 또는 주말 실시에서 ‘일과 후’에도 운영하는 등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대입 수시(특별) 전형에 창업 특기자전형 도입

- 기업이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본인의 특기를 살려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입시에 창업특기자 전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창업특기자 전형 입학대상은 학생발명경시대회, 학생아이디어 경연대회, 창업경연대회 등의 입상자, 기업가마인드가 충만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선진국과 같이 어려서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질 좋은 창업원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다. 정규 교육과정에 창업교육 프로그램 도입·운영

- 청년층의 기업가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초등·중등·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되, 중기청 등 경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의 경제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되, 모의창업·아이디어경연대회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다만, 창업교육 교재는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3)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가. 청년창업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프로세스간 연계강화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술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해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서울특별시) 등의 수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수료자 등의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창업자금 지원 우대 등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경연대회, 사업화 지원 등이 중앙-지방정부간 유사·중복 추진됨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우선은 중기청과 시·도별 자치단체간 ‘청년창업지원사업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창업경진대회 사업의 경우,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중기청과 시·도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임.

(4)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

가. 청년창업투자전문펀드 조성

- 유망한 청년창업자의 사업자금 조달난 해소를 위해 투자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태펀드에서 1,000억원 규모를 출자하여 청년창업투자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과 성과가 높은 벤처캐피털회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 모태펀드 조성·운용 규모('10.12월) : 1조 2,691억원(중기청, 문광부 등 조성)
 - 투자대상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자,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식·기술 사업화기업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나. 청년창업 전용 정책자금 마련

-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 정책자금 중 청년창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 전용자금은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지원하되, 소요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임.

- * 2008~2010년 기간동안 중진공 창업자금중 20~30대 창업기업의 연평균 지원액이 1,700억원이었으며, 창업자금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추가 자금규모 및 향후 청년창업 붐 등을 고려할 경우 기존 지원액의 3배 정도인 5,000억원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원대상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지식집약형 청년 CEO로 하고, 지원금리는 고용창출기업 우대금리(최저 2.7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청년창업자금 신청시 약식심사 및 자금지원결정 등급시 우대(C+등급 → C등급)하고, 가능한 한 신용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도별 자치단체의 지역밀착형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창업 후 5년 이내 청년 CEO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료율(0.5%) 및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하되,
- 지원대상은 아이디어·서비스 창업 등으로 규정하여 중진공의 기술·지식집약형 창업지원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다.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엔젤소득공제제도의 개선 및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엔젤투자금액의 10%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예: 상한 3,000

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내용 : 엔젤이 창업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을 경우 5년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액의 10%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함.

* 일본의 경우, 창업 초기단계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 세제개정에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 도입을 포함함.

· 즉, 회사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엔젤투자하는 경우, 투자시점에서 엔젤투자액을 그해 총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 1,000만엔)해주는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성공 벤처기업인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회수자금(자본이득)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성공벤처기업 등이 청년창업기업에 엔젤투자를 하게 될 경우, 단순한 창업자금원의 확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한 기업에 경영·기술·마케팅, 그리고 청년창업자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어 청년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5)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및 재도전 제도 개선

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청년창업기업은 사회경험, 사업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기존

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당수의 창업기업이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창업초기 단계에서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창업자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성공 CEO와 1:1 멘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재창업 지원사업의 내실화

- 청년창업자가 건전한 기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재창업자금 취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사고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창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현행 40일)하고, 재창업자금에 가산하는 신용위험 금리(1.0%) 적용을 배제하며, 운전자금 상환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용회복 지원범위 또한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 우리나라는 기업부도시 CEO의 면책재산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재도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면책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의 경우, 연방파산법 제7장에 의한 면책재산 범위(11 U.S.C. § 522(b))가 거주주택(\$18,450), 자동차(\$2,950), 가구, 의복 등 가재도구(\$9,850), 보석(\$1,225), 장사수단(\$1,850), 생명보험, 각종 권리(사회보장혜택, 실업수당) 등에 달하여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있음(2004년 4월 1일 기준, 매 3년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
- 우리나라도 청년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실패를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사회문화와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건전한 기업경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면책재산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생계비 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청년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가. 청년창업 관련 정보의 DB 구축

- 청년창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경진대회,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지원 등 전 과정의 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 관련 정보의 DB는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단순 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창업성공/실패사례, 국내외 창업동향 소개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할 것임.

나. 청년창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지원하는 ‘청년창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센터는 창업에 관한 종합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진흥원에 설치하여 체계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